

---

# **「하도급법 개정」 입법청원**

## **- 중견기업에 대한 수급사업자 지위 부여**

---

2012. 10. 26



사단  
법인 **한국중견기업연합회**  
KOREA MEDIUM INDUSTRIES ASSOCIATION

# 하도급법 개정 입법청원<sup>1)</sup>

## - 중견기업에 대한 수급사업자 지위 부여

### [의견]

- ☐ 하도급법상 중견기업에 대해 수급사업자 지위 부여해야
-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간에서 산업허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,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위치에 있음
  -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하도급법은 중견기업에 대해 원사업자로서의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으며, 수급사업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(하도급법 제2조 ③ 참조)
  - 중견기업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, 수급사업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법적 차별을 받고 있음
  - 그로인해 중견기업은 하도급거래에서 대금지급, 결제수단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
  - 하도급법상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 지위를 부여해야 함

**[표 1]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범위 확대**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③ 이 법에서 “수급사업자”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<u>중소기업자</u> 를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와 <u>중견기업</u> (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)을 말한다. 단 중견기업은 매출액 1조 원 미만 기업에 한한다.

1)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조사기획팀 박양균팀장 T) 02-3275-2991, Email) [kpark@komia.or.kr](mailto:kpark@komia.or.kr)

정책사업팀 정용운 연구원 T) 02-3275-3088, Email) [jyw0927@komia.or.kr](mailto:jyw0927@komia.or.kr)

## [사유]

### 1) 현황

- ☐ 하도급법상 중견기업은 원사업자로서 의무만을 부담하고 있으며, 수급사업자 지위에서 제외
- o 현행 하도급법 제2조 ③항은 수급사업자 범위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고 있음

[표 2]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· 수급사업자

제2조(정의)	내용
②항 원사업자	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1. <b>중소기업자</b> [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,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] <b>가 아닌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</b> 2.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
③항 수급사업자	1.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(하도급법 제2조 2항)

- ☐ 하도급법상 중견기업은 원사업자로서 [표3]과 같이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함

[표 3]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의무 · 금지규정

의무 및 금지사항	세 부 내 용
원사업자 의무사항	1. 서면교부 및 보존의무 :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체결 · 변경 시 관련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고 이를 보존할 의무
	2. 하도급대금 등 지급의무 : 특정기일 이전(납품 후 60일 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후 15일)에 하도급대금/선급금/관세 등의 환급금을 지급하고, 기일을 넘기거나,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,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할 의무
	3. 기타 의무사항 : 내국신용장 개설의무,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, 건설공사 대금지급 보증의무,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,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

의무 및 금지사항	세 부 내 용
원사업자 금지사항	1.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금지 : 부당한 방법을 통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
	2. 부당한 위탁취소, 수령거부, 반품금지 :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고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
	3. 감액금지 :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외에는 감액행위를 금지
	4. 부당한 대물변제금지 :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
	5. 기타 금지사항 :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,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,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,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,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, 보복조치 금지, 탈법행위 금지 등

\*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<http://www.ftc.go.kr>

## 2) 문제점

□ 현행 하도급법상 중견기업은 원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, 수급사업자에서 제외되어 하도급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

○ 2010년 말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 수는 총 1,291개에 이르고 있으며, 중소기업에서 이제 갓 성장한 기업에서부터 대기업에 근접한 기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함

- 매출액 규모별 중견기업 분포를 보면 1천억원 미만이 605개사(46.9%), 1천억원에서 3천억원 미만 351개사(27.2%), 3천억원에서 5천억원 미만 154개사(11.9%), 5천억원에서 1조 미만 104개사(8.1%), 1조원 이상 77개사(6%)로 나타남

[표 1] 매출액별 중견기업 현황

	1천억 미만	1천억~ 3천억 미만	3천억~ 5천억 미만	5천억~ 1조 미만	1조 이상	총계
기업 수	605	351	154	104	77	1,291
비율	46.9	27.2	11.9	8.1	6.0	100

※ 자료: 지식경제부, 『실물경제동향』, 2012. 05 제2호

- 실제로 2011년 본회 실태조사에 의하면, 중견기업(300~999인 이하) 205개사 중 하도급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은 52.7%에 달하며, 이중 1차 벤더는 49.3% 2차 벤더는 3.4%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
- 이처럼 중견기업은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로 인해 수급사업자 위치에 있지만, 수급사업자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
  - 특히 이제 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매출액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조차도 수급사업자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
-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 지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규제에 해당하며 법의 보편타당성의 원칙에 위배
  - 법은 언제, 어디서,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보편타당하게 적용되어야 함
  - 중견기업은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위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 지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규제에 해당하며 법의 보편타당성 원칙에 위배
- 수급사업자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하도급 거래에서 대금지급, 결제 수단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
  - 중견기업이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에 하도급 대금을 지불할 경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
  - 반면, 수급사업자로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60일 이상 소요
  - 따라서 대부분의 중견기업은 “빨리 주고 늦게 받는” 상황에 처해 있어 금융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부담으로 작용(사례 참조)

### <P사 사례>

- 주요 원사업자 : 현대자동차, 기아자동차, 현대모비스, 한국 GM, 쌍용자동차, 르노삼성, 대우버스 등
- 원사업자 중 상당수가 외담채와 어음(120일)으로 결제하고 있으며, 현금결제의 경우에도 현대와 기아(15~30일 이내)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들은 90~120일
- 재하도급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의 결제기준 준수

#### <금융비용산정>

- 할인이자율 (이자율) : 6.8% /1년
- 하도급 대금관련 금액: 연 2,133억원(2011년 기준)
- 금융부담액 :
  - 1) 현금 및 수표기준(기회비용: 90일 기준)  $[640\text{억}(\text{하도급매출}) + 64\text{억}(\text{부가세 } 10\%)] \times 6.8\% / 365\text{일} \times (90-60)\text{일} = \underline{\underline{3.9\text{억} (60\text{일기준 대비 기회손실})}}$
  - 2) 어음기준 (120일 기준)  $[277\text{억}(\text{하도급매출}) + 28\text{억}(\text{부가세 } 10\%)] \times 6.8\% / 365\text{일} \times (120-60)\text{일} = \underline{\underline{3.4\text{억} (60\text{일 기준대비 금융비용)}}$
- 하도급 대금지급기일 60일 기준과 비교할 때 약 7.3억 금융비용 발생

- ☐ 이 외에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지위에서 제외되어 구두발주, 부당가격인하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음

### <구두발주 사례: H기업>

- H기업은 2001년에 설립하여 산업기계, 열교환기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1년 중견기업으로 성장 2011년 12월말 사업보고서 기준 자산 995억원, 자본금 23억원, 매출액 708억원에 이르고 있음
- 조선관련 업체인 대기업 A는 2010년 H기업에게 선박과 관련된 특정부품에 대한 제품개발을 의뢰하고 해당부품이 인증·검사 통과 후 구매해 주기로 구두약정
- 이에 H기업은 자체 연구인력과 자금을 동원하여 10개월에 걸쳐 해당제품을 개발하여 성공하고 시제품 완성
- 완성된 시제품을 가지고 생산에 들어가기 위해 A기업에 구매계약을 요청하였으나 해당제품의 국내·외 Reference가 없다는 이유로 구매계약거부
- 이에 따라 H사는 해당 제품연구 및 시제품 생산에 따른 연구인력 투입 및 개발에 소요된 투자자금 피해발생(총투자금액 5억 5천만원)
- 특히 개발된 제품은 특정 용도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일반 시장에 판매 불가
- 구두약정에 의한 제품개발로 위법성 입증 어렵고, 입증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대기업 A와의 거래관계를 고려할 때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없음
- 이에 따라 제품개발에 투입되었던 투자비용은 고스란히 H기업이 떠안게 됨

### 〈부품단가 인하 요청 사례: R기업〉

- 1988년 설립돼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·판매업 주업종으로 하는 중견기업
- 2011년 12월말 사업보고서 기준 자산 2,189억원, 자기자본 1,282억원, 매출액 3,945억원, 상시종업원수 700명
-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대기업인 H사 및 H사의 계열사는 R사의 주력생산부품 납품과 관련하여 장기공급계약을 조건으로 매년 일정비율로 부품단가 인하 요청하고 있으며 R사는 현실적으로 거절이 어려움
- 기업 R은 이 같은 Hard CR규정에 따른 단가인하에 따른 부담분을 재하도급 관계에 있는 2차, 3차 협력사(대부분 중소기업)에 대해 적용하지 못함
- 따라서 매년 발생하는 단가인하에 따른 부담분을 고스란히 R기업이 떠안게 되는 문제발생
- 대기업과 거래하는 장기부품공급계약기간은 보통 4~5년(자동차 life-cycle주기)이며 이에 따른 R 기업의 연간 손실액은 30~40억으로 추정
- R기업 자체분석결과 2011년 Hard CR에 따른 추정손실액은 32억에 달함

## 3) 개선방안

- 하도급법상 매출액 1조원 이하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 지위 부여
- 정부는 중견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월드클래스 300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,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
- 월드클래스 300 정책 대상 기업이 매출액 1조원 미만임을 고려할 때 하도급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해 수급사업자 지위를 부여

### 하도급법 개정안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③ 이 법에서 “수급사업자”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와 중견기업(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)을 말한다. 단 중견기업은 매출액 1조원 미만 기업에 한한다.